

위기 이후... 정치적 임투가 필요하다!

경제회복 과정에서 더 커진 임금격차, 노동자 단결 전략이 절실

자본에겐 최고의 한 해, 노동에겐 최악의 한 해

작년 한해는 한국 재벌들에게 최고의 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이다.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현대차와 그 계열사들은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작년 한 해에 벌어들였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게 2010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 발레오만도, KEC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의 공권력 투입이 이어졌고, 공공부문에서는 정권의 노조 탈퇴 공작이 횡횡했다. 재벌들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동안 정권은 경제위기 운운하며 자본의 구조조정을 독려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 이상 하락했다.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경제 회복 시기가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재벌들의 공간이 가득 찼으니 노동자들의 생활은 올해 조금 나아질 것인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경제가 일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지금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자본은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위기 이후 이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IMF 위기 때를 기억해보자. 자본은 IMF 위기를 거치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비정규 악법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가 끝난 2000년 이후 자본은 크게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고통 받아야 했다. 자본은 포섭 가능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조금 나누어 주었지만, 다수의 배제된 노동자들은 더욱 가혹하게 착취했다. 예를 들면 1993년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64% 수준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2007년에 44%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경제위기 시기에 자본은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중소 하청업체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했다. 그리고 올해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작을 부릴 것이다. 파견노동, 단시간노동 등을 제도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부터 상생전략으로 위장한 재벌들의 하청업체 관리 계획까지 정권과 자본의 수작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전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하락을 겪은 많은 단위 노동조합들은 올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응당 모든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회복은 물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 적극적인 임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사내외 하청 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자 운동에 미래는 없다.

지역 공동 투쟁, 산업 업종 집단 교섭, 최저임금투쟁으로 단결하자!

시기집중 입단투도, 연대투쟁 기풍도 사라진 한국 노동자 운동 현실에서 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내고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

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공동 임투, 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경기, 대구 등에서는 5월 이후 입단투와 정리해고 투쟁, 지역현안 등을 묶어 지역 공동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큰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5월 이후, 2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제된 데다 물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걸맞은 위력적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임금 격차 축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올해 임금 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 현실에 대한 적극적 폭로이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재편 전략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121주년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자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 글 쓰는 순서 >

- 위기 이후, 정치적 임투가 필요하다 1
- 물가고와 생활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으로 돌파하자! 2
- 복지국가정치동맹은 노동자계급 정치의 포기다 2
- 핵발전소 폐쇄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3
- 중동·북아프리카, 독재의 벽을 넘어 해방을 향한 첫걸음을 떼다 3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미 FTA 막아내자! 3
- 노조법 전면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 이주노조 합법화,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모든 노동자의 과제다 4

물가고와 생활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으로 돌파하자!

MB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대비, %)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4.7% 상승했다고 한다. 생활물가는 4.9%(2월 5.2%)로 조금 더 올랐다. 유가 상승과 농축수산물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 속에 더 가파르게 상승한 MB물가
경제위기 초기 유가가 145달러까지 폭등하고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생활물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MB 물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무는 47.3%, 양파는 무려 83.5%가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배추는 159.1% 올랐고, 마늘은 94% 올랐다. 고등

어(73.4%), 양파(83.5%), 돼지고기(53.4%)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생필품 52개 가운데 식탁에 자주 오르는 주요 먹거리 가격은 대부분 오른 것이다. 그리고 세탁비누(75.4%)와 화장지(22.4%), 샴푸(16.8) 등의 생활필수품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자, 특히 소비가 주로 생활필수품에 한정되는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생활 수준 악화는 소비자물가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전세값 상승과 부채증가

4월 현재 약간 잠잠해지긴 했지만, 노동자들의 주거와 관련된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12.5%, 연립주택 전세는 7.7%가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전세난은 중소형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서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컸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수도권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의 전세값이 평균 3,726만원 올랐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전세금 상승을 자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느끼는 것은 빚뿐인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게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물가상승과 생활고 타개, 임금인상이 답이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상승이 원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등 일시적 원인에 의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통계상으로는 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1%여서 정부 물

가 관리선을 크게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필수품과 주거비 등이 크게 올라 노동자 민중들, 특히 저임 노동자층의 생활이 극도로 악화된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물가 상승에는 공세적 임금투쟁으로!

물가고로 인한 생활고를 타개할 방안은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다. 물가잡자고 실업과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명확하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유로, 소비자물가 상승보다 더 크게 상승한 생활물가 상승을 이유로, 그리고 생활물가 상승보다도 더 크게 상승한 MB물가 상승을 이유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의 상당한 이윤에 비춰 봤을 때 노동자의 상당한 임금인상이 있다고 해서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이유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 투쟁이, 그리고 최저임금 투쟁과 민주노총 다수 조합원들의 임금인상투쟁의 결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노동자계급 정치의 포기다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이인영,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참여연대 등의 인사들이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나라당 재집권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므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야권이 연대하여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리고 공적 서비스의 축소로 민중 생존권이 커다란 위기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이야기하는 복지로 민생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는 복지국가론

정동영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작 그 해결책으로 '유연안전성'을 수용하자고 한다.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그 위험을 조금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기조가 유지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실업과 저임급 일자리를 오가야 한다.

또 정동영은 박근혜의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복지국가론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좀더 '후하게' 베풀겠다는 것이지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동유연화와 개방 확대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다를 바가 없다. 좀더 진보적인 립서비스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내가 몇 % 더 좋게'하는 흥정 외엔 실질적인 차이를 내세울 근거가 별로 없다.

똑같은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저들의 '복지국가론'에는 더 이상 불가능한 낡은 복지국가 모델이 있거나 현존하는 후퇴한 복지국가만이 있을 뿐이다.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전후 자본주의의 성장기에 노동과 자본의 계급타협을 통해 선진국에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낡은 복지국가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금융적 팽창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지상 목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복지의 성격을 전환한 후퇴한 복지국가일 뿐이다.

복지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를 배제, 착취함으로써 만들어진 산업화 양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미국 모델이든, 스웨덴 모델이든 우리도 선진국처럼 되자는 논리라면 불평등한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적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복지

복지국가론자들은 교육, 양육, 노후, 주거, 의료, 고용이라는 '6대 불안'을 모두 복지국가라는 깃대기로 모으려 한다. 그러나 각각의 사안은 학벌과 노동시장의 문제, 여성노동과 가족의 문제, 부동산 문제, 의료자본의 문제, 노동유연화 등 불안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각기 다르며 총체적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몇몇 복지정책의 조합과 재원 마련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복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6대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누가 생활고를 더 잘 해결해

줄 것인가"로 접근하면 이명박식 경제성장론이나 박근혜식 복지국가론과 구별되지 않는다. '6대 불안'과 '복지 혜택'이라는 접근법이 아니라 '6대 권리'와 '노동자 투쟁'이라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진짜 '복지'를 쟁취하자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복지국가담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을 답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복지동맹은 변혁의 관점을 제거하고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수동적 지지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탈계급적인 자유주의 정치기획이지 노동자계급의 정치전략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이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임금 삭감, 고용 불안에 맞선 공세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를 가로막는 재벌, 금융자본, 관료와 지배엘리트에 맞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중동·북아프리카, 독재의 벽을 넘어 해방을 향한 첫걸음을 떼다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과 새로운 노동자 국제연대의 전망

뜨거운 민주화 바람

운명의 사슬처럼 강력해 보였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독재정권의 몰락은 놀랍고, 갑작스러웠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 예멘, 바레인, 알제리, 리비아 등으로 번졌고, 시리아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노점상 청년의 분신 소식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찰의 폭력은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튀니지에서 벤 알리 대통령이 망명길에 오르고, 이집트의 무바라크도 30년 독재를 뒤로 한 채 망명지를 찾아 해매는 처지가 되었다. 폭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한 경우라도 상난 민중들의 잠재우기 위해 계엄령 철폐 등 유화책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석유경제의 그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경제는 석유 산출 여부에 따라 국가간 격차가 크며, 국내적으로도 석유와 관광산업을 통제하는 소수 엘리트와 대

중 간 빈부격차도 크다. 지난 수십 년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사회 서비스를 해체하고, 공기업을 사유화시켜 대량해고를 낳았으며, 초민족적 기업의 국내산업 지배로 국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 지역 전체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어선지 오래다. 더욱이 최근 유가상승으로 석유산업을 통제하는 소수 엘리트는 커다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유가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수입농산물에 크게 의존하는 이 지역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민중들의 광범한 불만은 터져나올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주류 미디어는 혁명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역할만을 부각시켰지만, 조직된 노동자 운동 역시 투쟁의 기획·전개·사후 사회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튀니지에서 노점상 청년의 분신을 오프라인에서의 투쟁으로 만든 것은 튀니지 노총(UGTT)의 시디 보우치드 지역본부였다. 또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정권의 하수인에 다름없던 이집트 노총의 통제

밖에서 스스로 파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에 나선으로써 형세를 일변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리비아 공습, 서방의 노골적 탐욕

수십 년 동안 이 지역 독재자들은 이슬람 세력을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해 왔다. 이 땅의 석유에는 서방의 사활적 이해가 달려 있다. 독재자들은 국제사회가 국내 민주주의 억압을 묵인해 주는 대신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 보장, 즉 이슬람 세력 배제를 약속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반미 행보를 취하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사실 미국의 반탈레반 동맹의 일각이 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더욱이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세계는 바레인 등의 민중운동 탄압에는 눈 감으며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중잣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상주의의 탈을 벗은 서방의 탐욕은 향후 지역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국제연대의 장이 열렸다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억압받던 세력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하여 좌파 전선체인 하쉬드가 제안한 민주노동자당이 발족하였으며, 이집트 독자노조연맹이 이집트 노총의 통제를 벗어나 결성되었다. 튀니지 노총은 벤 알리 퇴임 이후 임시정부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기존 정권 인사의 완전청산을 요구하며 임시정부에서 탈퇴하고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의 인물과 질서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사회적 밑그림을 가지고 기존 질서를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교류를 통한 경험 공유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 지역 민주화 운동의 진전은 국제연대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집트 노동자들이 미국 위스콘신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 것처럼 이 지역 노동자 운동의 부상 은 선진국 노조 위주로 짜여진 국제 노동운동의 질서를 바꾸어 내기 위한 도전이기도 하다. 실로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핵발전소 폐쇄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체르노빌, 후쿠시마! 더 이상은 안 된다

핵무기, 핵발전의 숨의 의도

각국 정부와 핵산업계, 이른바 전문가들은 '핵발전 신화'를 조작해 핵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거짓 선전을 퍼뜨렸다. "평화를 위한 핵은 괜찮다. 핵발전소는 친환경적이다,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다.

첫째, 핵무기 축소 압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를 위한 핵'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지었다. 이스라엘, 인

도, 파키스탄도 핵발전소를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기술을 습득하려는 것은 유사시에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처리할 수 없는 위험

둘째,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하고 장기간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인 방사성물질을 만들어 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이를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5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고준위 핵폐기

장을 마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셋째,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 찬핵론자들은 사고 확률이 백만 분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30년간 중대 사고만 3번 발생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모두 최고의 핵 기술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핵발전소 폐기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한국은 지금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7기가 건설 중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신규부지를 물색해 추가 건설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핵발전의 종단을 요구해야 한다. 신규부지 선정은 물론이고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의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이권으로 뿔뿔 뭉친 자본과 국가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반핵운동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값비싼 교훈을 잊지 말자.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미 FTA 막아내자!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임박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글 번역본 오류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EU FTA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FTA가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통상제도 선진화 효과로 국민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FTA는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만 목적하지 않는다. FTA는 자본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한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이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는 무엇이었나. 금융 자유화에 따라 초국적자본이 한국경제를 집어삼켰고 국내자본은 해

외로 이동했다.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저임금이 강요됐다. 노동자와 여타 국민경제의 희생을 바탕으로 삼성·현대 재벌은 엄청난 이득을 누렸다. 한국경제가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 확대와 재벌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FTA가 체결되면 세계화의 모순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농촌·농업이 붕괴할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촉진되고 의약품 가격도 인상될 것이다. 금융 자유화 기조를 확대함에 따라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미 FTA를 막아내자.

한미 FTA
10문 10답

사회진보연대소책자
한미 FTA10문 10답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2. 자유무역의 원칙이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 3. 한국 정부는 왜 한미 FTA를 추진했나? / 4. 미국 부시정부는 왜 한미 FTA를 추진했나. 오바마 정부는 재협상과 국회비준을 시도했나? / 5. 한미 FTA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 6. 한미 FTA 노동 장(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7. FTA에 따른 금융과 투자 자유화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8. 한EU FTA는 한미 FTA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가? / 9.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10. FTA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5월 중순 발간 예정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http://www.pssp.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총노동전선 구축하여 노동법 전면 개정하자!

민주당·한국노총 공조 탈피하고, 지역 현장 투쟁 강화해야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8대 의제를 선정했다.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설립 절차 개선 △손배가입류 제한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필수공익사업 폐지 및 최소 유지 업무 신설, 어느 의제 하나 긴급하지 않은 게 없다. 아니,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다.

노조법 전면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자성 확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이 웅변하듯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 사례가 보여주듯이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운수, 건설,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사례처럼 정부가 설립신고증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절차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된 손배가입류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관철시킨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활동을 지극히 위축시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능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전

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창구단일화가 산별교섭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율교섭 보장과 함께 산별교섭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필수업무유지제도를 폐지하여 박탈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노동계와 대화할 수는 없다”고 뜻을 박았고, 경총은 노조법 개정이 “노사균형의 기본 근간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 자본가단체와 정면으로 맞붙어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야 한다.

야5당 연대와 한국노총 공조 구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야5당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한국노총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책회의에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외에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론 확정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손댄 부분만 다시 약간 손질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8대 요구 중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한 민주당은 대책회의에 한국노총 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자신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경총이 ‘총연합단체 공익사업 후원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의 기업파견자 120명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구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활용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회피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부분을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서 명분과 정치적 실리를 꾀할 수 있다. 설사 민주노총의 8개 요구에 대해 대책회의가 합의하여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한나라당을 포함하는 국회 협의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노총의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민주노총은 언제라도 소외될 수 있다. 이는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결국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한국노총에 좋은 일만 시켜주고 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총노동전선 구축하여 노동법 전면 개정하자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5당 연대와 한국노총 공조 구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자본가단체

의 눈치를 볼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특수고용,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문제나 손배가입류 제한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야권연대가 노조법 개정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한 지경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전북 버스노조 투쟁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사측과 야합하여 조합원을 짓밟고 지도부가 검은 돈을 챙기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내하청급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006년에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에 사용자들과 합의했다. 한국의 민주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노동자 행태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어둠의 장벽을 깨부수어야 한다. 현재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부터 우리 모든 노동자의 힘을 모아 총노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그것만이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대에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길이다.

이주노조 합법화,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모든 노동자의 과제다

이주노조 탄압을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정부의 이주노조 위원장 탄압

한국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을 탄압하면서 이주노조 활동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지난 6년 동안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노동자와의 단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활동해 왔다.

최근 정부는 위장 취업으로 체류허가를 취득했다는 날조된 사실을 근거로 카투이라 위

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현재 카투이라 위원장은 단속의 위협 속에서 노조 활동을 용감하게 지속하고 있다.

지속되는 이주노조 탄압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2007년 판결과 수차례에 걸친 ILO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이주노조의 법적 자격을 부인해 왔다. 또한 출입국관리소는 수많은 이주노조 간부를 추방시

켰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이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노조 탄압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하는 것인데, 이는 노동법 개악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주노동자 탄압은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분할이며 탄압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혹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착취와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고 정치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단속추방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잘해봐야 ‘외국인’, 심지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러한 정책을 당연시 한다. 이주노동자는 열등한 타자,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최하층으로 내몰고,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노동자를 분할시키려는 시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경제의 일부이며,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탄압을 반대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 계급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을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지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단결된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과 같다.

이주노조 합법화,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모든 노동자의 과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반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주노조 인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조는 물론 다른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건설, 서비스, 중소제조업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과제다.



시화운동 2011년 5·6월호 | 통권 100호

시화운동

2011년 5·6월호 | 통권 100호

한국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 /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노동조합 / 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역할 /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 기획연재 북자국가담론 비판 - 3 / 북자국가 정치동맹, 왜 문제인가 / 공공운수 노조 건설, 의미와 과제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의 쟁점과 함의 외

www.movements.or.kr
구입 및 구독문의 : 02-778-4002, edit@jinbo.net